

BRIEF

Vol. 13 | 2022. 09.



작성 : 오지혜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층 T.055-713-7074 F.055-713-7093 www.gnwff.or.kr

경남 다자녀가구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¹⁾

01.

경남 다자녀가구
실태조사

02.

경남 다자녀가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03.

경남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

- 출산을 감소와 함께 다자녀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반면 한 명만 출산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고 부부만 사는 무자녀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경남에서 출생한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로 태어난 경우는 45.0%, 두 번째 자녀는 43.6%, 세 번째 이상의 출산 순위로 태어난 경우는 10.9%였으나, 2020년에는 첫째 자녀가 52.9%, 둘째와 셋째 이상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는 각각 37.9%, 9.2%로 나타남
- 다자녀가구 비율 또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함. 전국의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2000년 10.5%에서 2020년에는 8.3%까지 감소하였고, 경남은 2000년 10.9%에서 2020년에는 9.2%로 감소함. 전국의 2자녀 가구 비율은 2000년 42.1%에서 2020년에는 35.1%까지 감소하였고, 경남은 2000년 54.5%에서 47.1%까지 감소함
- 최근에는 모든 아동의 출발선이 동등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설계가 요구됨으로써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기 시작함(최효미·박은정·엄지원, 2020)
-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주거지원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되고 있음. 경남에서도 이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및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정책이 필요함

01 | 경남 다자녀가구 실태조사

조사 개요

- 경남 지역 다자녀가구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2일 ~ 2022년 5월 31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 경남 지역 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 총 871명

조사 항목

- 임신·출산, 자녀 양육·교육, 직장 및 일·가정 양립,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등

¹⁾ 본 내용은 2022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 다자녀가구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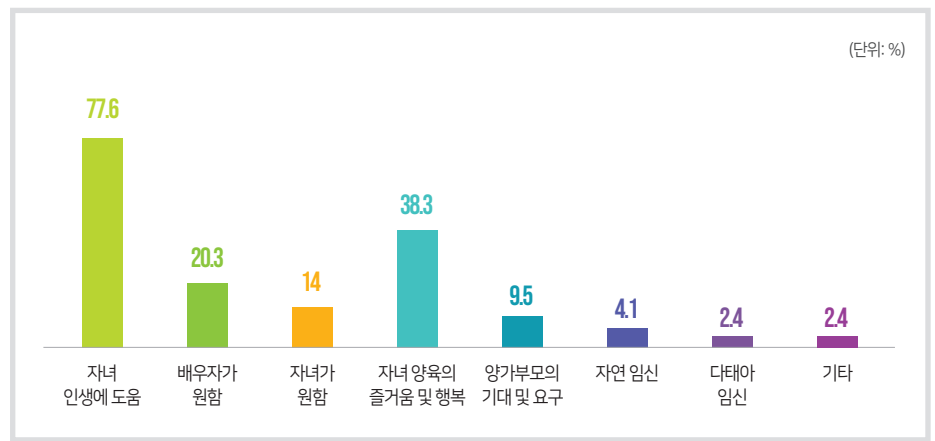
02 경남 다자녀가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다자녀 임신·출산

■ 다자녀 출산 계기

-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게 된 1순위와 2순위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 된 항목은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로 총 676명(77.6%)이 해당 원인을 1·2순위로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의 즐거움 및 행복이 좋아서(아이고 예쁘고 좋아서)'가 334명(38.3%), '배우자가 다자녀를 원해서' 177명(20.3%), '자녀가 형제·자매를 원해서'가 122명(14.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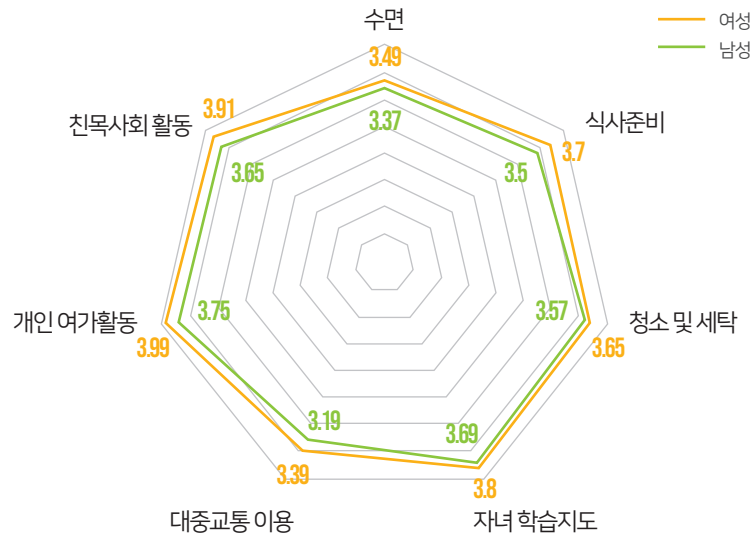
그림 1 다자녀 출산 계기



(2) 다자녀 양육 및 교육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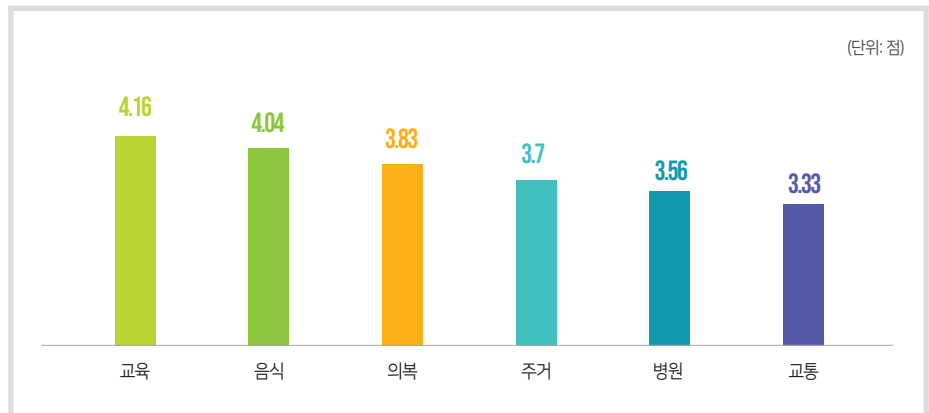
그림 2 다자녀 부모로서 활동별 어려움



다자녀 부모로서 어려움

- 다자녀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 여성의 식사 준비 어려움 정도는 3.70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3.50,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 3.39, 남성 3.19, 개인 여가 활동의 어려움은 여성 3.99, 남성 3.75, 친목·사회 활동은 여성 3.91, 3.65로 남성보다 여성이 어려움을 더 겪고 있음
- 다자녀가구의 항목별 가정경제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비(4.16점), 식비(4.04점), 의복비(3.83점), 주거비(3.70점), 병원비(3.56점), 교통비(3.33점) 순으로 부담이 나타남

그림 3 다자녀가구의 항목별 가정경제 부담 정도



남편의 가사·육아 부담

- 다자녀를 둔 아내에게 남편의 가사 및 육아 부담에 관해 물어봄. 남편과의 가사 부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9.0%(220명)이고, 보통이라는 23.8%(134명), 그리고 나머지 37.2%(210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그림 4 남편의 가사 부담 공평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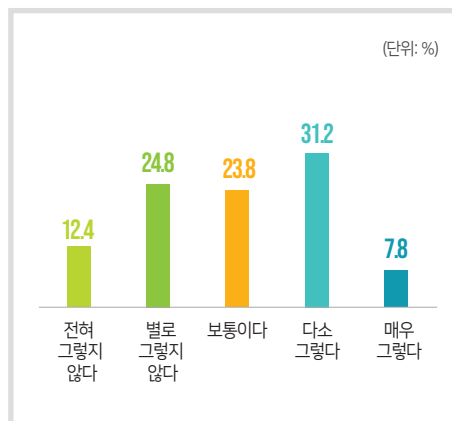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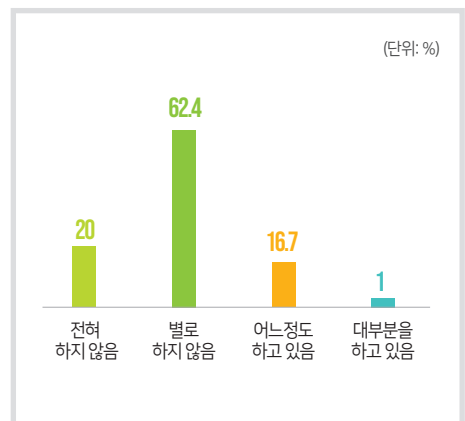


그림 5 (공평하지 않을시) 남편의 가사 부담 정도



- 남편의 가사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 응답자 210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가사 부담 정도를 물어본 결과, 82.4%가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6.7%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6 남편의 육아 분담
공평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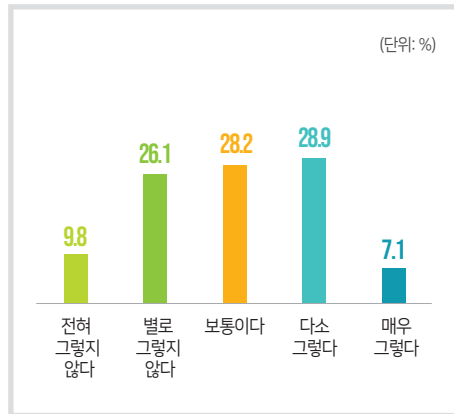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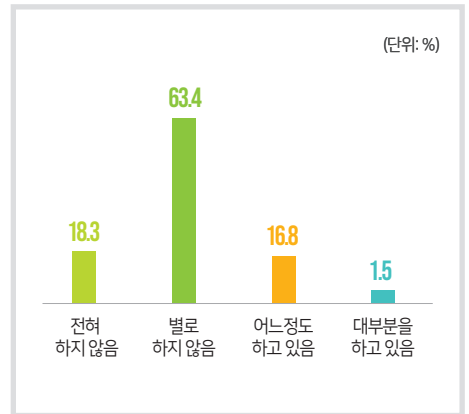


그림 7 (공평하지 않을시)
남편의 육아 분담 정도



- 남편과의 육아 분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0%(203명)고, 보통이다는 28.2%(159명), 그리고 나머지 35.9%(202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남편의 육아 분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 응답자 202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육아 분담 정도를 물어본 결과, 81.7%가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6.8%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응답함

(3) 다자녀가구 직장 및 일·가정 양립

■ 가족친화제도 활용

- 현재 혹은 과거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 활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자녀수당 사용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사용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그림 8 여성의 가족친화제도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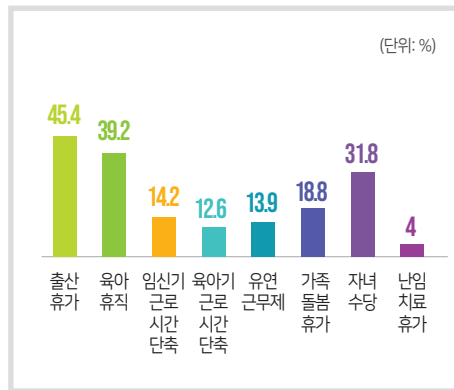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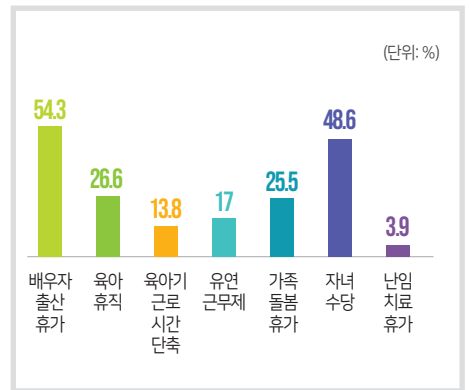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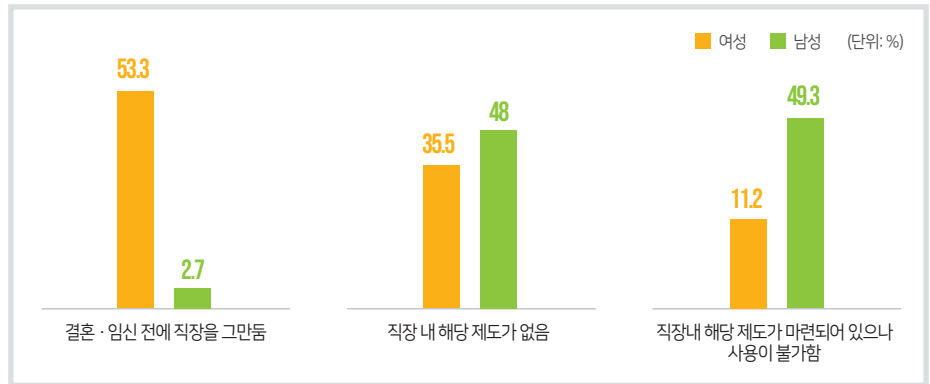


그림 9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활용 여부



-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289명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여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3%가 결혼 및 임신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35.5%는 해당 제도가 회사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나머지 11.2%만이 직장내 분위기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반면, 남성은 절반에 가까운 49.3%가 해당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회사 분위기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48.0%는 해당 제도가 없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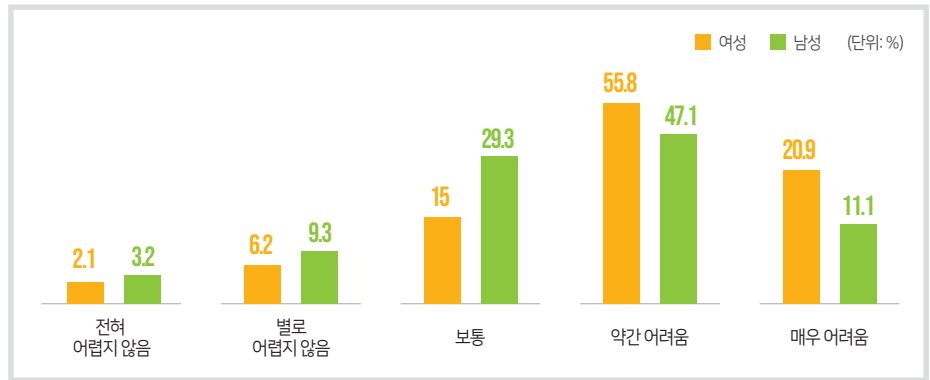
그림 10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일·생활 균형

-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음. 여성의 경우 76.7%, 남성은 58.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1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정도



(4)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 중앙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23개에 대한 정책 인지도를 조사함.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59.7%), 어린이집 우선 입소(42.8%),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41.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29.9%), 주택 특별공급(29.6%), 전기요금 감액(27.8%) 순으로 인지도가 나타남

그림 12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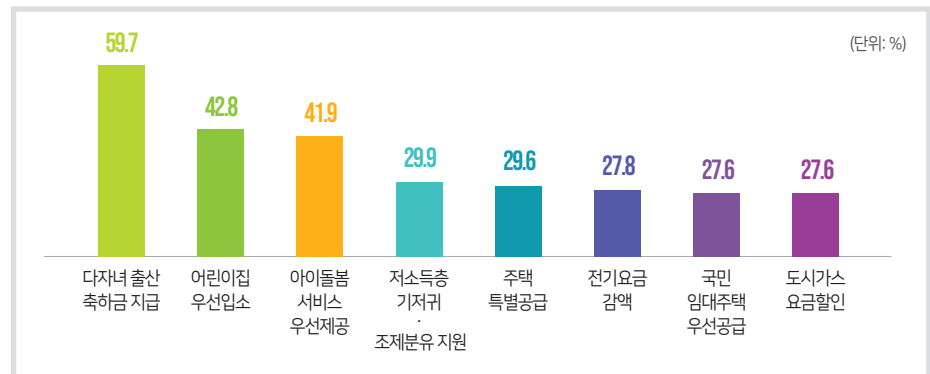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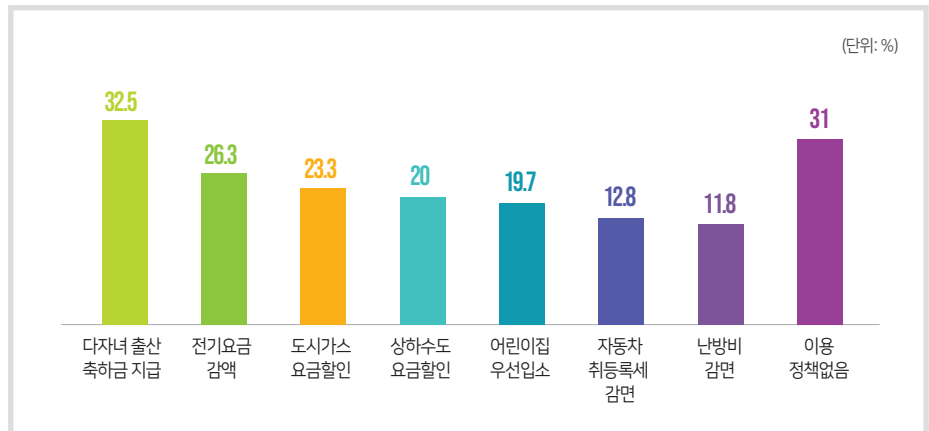


그림13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이용률



- 중앙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23개 이용률을 조사함.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32.5%), 전기요금 감액(26.3%), 도시가스 요금 할인(23.3%), 상하수도 요금 할인(20.0%), 어린이집 우선 입소(19.7%)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경남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 응답자 중 386명(44.3%)은 아는 정책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90명(44.8%)은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214명(24.6%)은 셋째 이상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에 대해 알고 있음. 한편, 독립대학 수업료 감면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61명(7.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정책은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53.8%), 셋째 이상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16.3%), 독립대학 수업료 감면 및 생활비 지원(2.1%)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5.7%는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그림14 경남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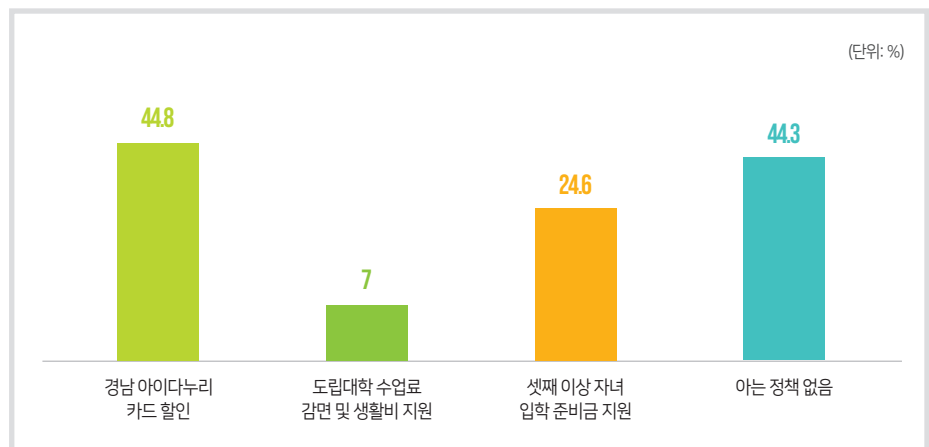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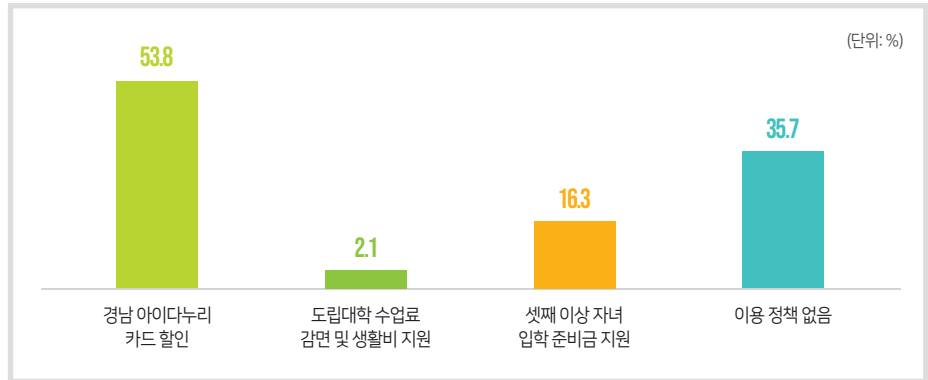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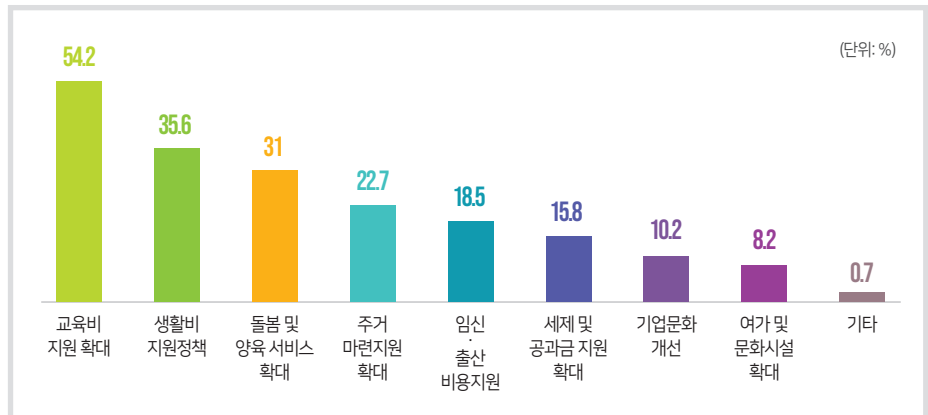


그림15 경남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이용률



-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함. 교육비 지원 확대(54.2%), 생활비 지원정책(35.6%), 돌봄 및 양육 서비스 확대(31.0%), 주거마련 지원 확대(22.7%),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18.5%), 세제 및 공과금 지원 확대(15.8%), 기업문화 개선(10.2%), 여가 및 문화시설 확대(8.2%), 기타(0.7%) 순으로 정책이 선호됨

그림16 필요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03 경남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

다자녀 양육 및 교육

- 다자녀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특히 개인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과 같은 개인 시간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낮은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해 여성은 직장일+가사+육아, 혹은 가사+육아 라는 이중노동을 겪고 있음. 이는 사회 전반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가족친화적이지 못한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일례로 다자녀가구에 가사 지원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시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가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함으로써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킬 수도 있음

다자녀가구 직장 및 일·가정 양립

- 비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가부장적인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중노동과 그에 따른 시간 빈곤 현상, 그리고 일·생활 불균형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에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해당 정보를 '어디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 지원정책을 종합한 하나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실제 거주지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홈페이지보다는 앱 개발을 통해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돌봄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앱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 활성화에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 행복출산원스탑서비스처럼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 무엇보다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예컨대, 내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한번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남 제로페이 앱처럼 이용자가 많은 앱과 연동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링크를 제공할 수 있음
 - ▶ 무엇보다 다자녀가구는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생활 밀착형 할인 제도와 지원 사업이 필요함